



무역과 인력이동

이장원(한국노동연구원 국제협력실장)

2005년 1월까지 종결되어야 할 WTO의 도하개발 아젠다 협상의 주요 이슈 중의 하나가 서비스 인력이동이다. 이는 이른바 서비스 분야에서 Mode 4라고 지칭되는 이슈인데 올해 제출된 각국별 1차 양허안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간, 그리고 무역 정책 담당자와 이민국(출입국) 당사자 간의 이견이 워낙 커서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물론 지난 9월 칸쿠회의의 결렬로 전체 협상이 예정 기한을 초과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많아졌고, 인력이동 문제도 자연히 조금은 시간을 벌 수 있겠지만 문제의 근본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기 힘든 상황이다.

이런 차원에서 지난 11월에 제네바에서는 OECD, IOM, World Bank가 공동 주최한 ‘무역과 이주(Trade and Migration)’ 관련 전문가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여기서도 3일간의 장시간 토론을 끝내고 나온 잠정적인 결론은 Mode 4는 WTO에서 볼 때 노동이동의 문제가 아니라 무역의 문제라는 점이지만, 실제로 각국의 입장에서는 그 둘간의 관계가 쉽게 분리되지 않고 있어, 공동 논의가 더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2001년 도하에서 시작된 협상의 초점은 개도국의 관심 분야에서 무역자유화의 필요성에 맞추어져 있었다. 서비스 분야의 경우 개도국들의 핵심사항은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예를 들면 간호나 정보기술 분야)의 단기간 이동에 관한 것들이다. 이러한 것들이 논의되는 한 가지 분명한 이유는 단기간 일을 하기 위해 해외로 인력을 파견하는 많은 개도국들에게 인력이동이 서비스분야에서의 유일한 수출 관심처럼 보여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력이동은 선진국들에게도 역시 중요한 화두이다. 서비스 분야, 가령 법, 의료, 정보기술, 건설들은 서비스공급자들의 활발해진 이동을 경험하고 있고 핵심 분야에서의 기술 부족을 경험하고 있는 국가들은 하나의 해결책으로 단기간 노동이동에 기대를 걸고 있다. 몇몇 선진국이 현재 주요한 인력송출 국가이고 개도국은 주요한 수용 국가인 것과 같이 새로운 노동이동의 패턴 역시 주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이것은 더 넓어진 인구통계학적인 이동이다. 몇십년 후 개도국의 7억명의 젊은이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선진국들은 인구노령화에 직면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1차 양허안을 보면 개도국들은 도하개발 아젠다가 개도국의 입장을 배려하도록 출범하였다는 점에서 개도국의 이해가 큰 Mode 4분야에서 선진국들의 양허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선진국들은 고용시장에 대한 영향을 우려하여 기본적으로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9·11 테러 이후 보안 강화 측면에서도 양허 확대를 주저하고 있다는 특징이 나타난다. 즉 장기적으로 Mode 4는 선진국에게도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난관이 버티고 있는 것이다.

WTO가 시인하듯이 인력이동은 자유화에 대한 합의를 보기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금융이나 통신 등의 서비스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인력의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으나 실제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노동허가제(work permit), 비자제도, 거주허가제도 등에서 이를 저해하는 실정이며 그럼에도 현 단계에서 WTO 서비스 인력이동은 이런 제도들을 무시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으므로 쉽게 해결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잠정적으로 향후 인력이동의 문제는 결국 단순기능인력은 포함되기 힘들고 숙련인력 및 전문인력 중심으로 기존의 이민, 출입국, 노동허가정책과 어느 정도 연계되어 자유화를 이룰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 경우 선진국으로의 서비스 기능인력 및 전문인력의 진출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외국 서비스인력 문제만큼이나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대책과는 다른 차원에서 Mode 4 문제에 있어서는 송출국과 수용국의 양 입장을 견지해서 협상에 임할 필요가 있다.